

“DMZ마을 리모델링 동참” 대성동 달려가는 기업들

KT·청호나이스 등 ‘통일맞이 첫동네’에 물품·인력제공 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 마을 개발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통일맞이 첫동네’로 꼽히는 대성동 마을 개선 사업에 물품과 인력제공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주택·기반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
초고속망 깔고 비데·정수기 설치
한전·NH농협도 성금 지원 검토**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 개발 사업에 LH를 비롯해 KT, KT&G, 청호나이스 등 4개 기업이 사업 동참을 결정했다. KT는 초고속인터넷망 설치를 약속했고 청호나이스는 정수기나 비데 등을 대성동 마을에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경기도 파주시의 DMZ안에 있는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을 30년만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북 군사분계선과 불과 수



백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대성동 마을은 현재 47가구, 2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장기간 개보수가 이뤄지지 못해 주택과 기반시설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다

우선 KT는 통신인프라 선두업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대성동 마을회관 내 이장실을 화상회의시스템 등이 갖춰진 최첨단 기가오피스(Giga Office)로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DMZ라는 특성상 외부 출입이 어려운 만큼 초고속인터

넷을 통해 대성동 주민들이 바깥 세상과 보다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가정에 비데를 무료 제공하고 마을내 공공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호나이스 측은 “대성동마을이 지닌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이번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며 “우리 회사의 생활용품이 오랫동안 낙후된 생활을 해온 대성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 사업 참여를 확정된 4개 기업 이외에도 한국전력과 현대건설, NH농협 등도 회사와 관련한 물품이나 인력 또는 성금을 대성동 사업에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마을 개선사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꾸려 지원계획을 마련 중이며 한국해비타트를 비롯해 국내 참여기업들과 오는 7월 8일 대성동마을에서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17.8 X 17.3 cm

DMZ 관광지에 '지뢰밭'... 무방비로 민간인에 노출

입력 2015.05.11 (07:38) | 수정 2015.05.11 (08:1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생태계가 잘 보존된 비무장지대 DMZ 주변에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퉀 관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수십만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지대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은 찾아지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무장지대 인근에 역사공원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을 유심히 살펴보니, 풀숲에 '지뢰 경고판' 하나가 보입니다.

민간인의 지뢰 지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은 덩굴에 뒤덮인 채 쓰러지고, 끊어져 있습니다.

이 곳은 지뢰 위험 지역이지만 경계선도 허물어져 있고, 위험을 알리는 표식조차 떨어져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호(한국 지뢰제거연구소장) : "비닐 끈으로 이렇게 해두니까 떨어져서...이게 떨어져 버리면 누가 지뢰 지대인지 알겠습니까."

지뢰 지대는 민간인이 '어디에서나' '충분히' 위험을 알아차리도록 반드시 경계 표지가 설치돼야 하지만 민통선 인근 지뢰 위험지역 160곳 중 67%가,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DMZ 연계 개발 열풍 속에 등산로가 만들어지는 등 민간인 출입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두순(등산객) : "(지뢰가) 떠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계곡을 지나갈 때는 움푹한 데보다는 바위 쪽을 짚고 가요."

<인터뷰> 정인철(생태지평연구소 정책팀장) :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법제도나 구조가 돼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할 사단에만 관리가 위임돼 있어서, (현장을) 모니터링할 근거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90년대 이후 지뢰 폭발사고로 70여 명이 숨졌고,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는 60만 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